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09호 / 02월 12일

중국의 금년 거시경제정책 방향

*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정책연구원은 금년도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, 전망함.

1. 재정정책

□ 중국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확대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지만, 재정적자의 누적을 우려하여 지출규모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지출구조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전망이다.

- 금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됨.

○ 재정적자의 누적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중국의 재정지출은 SOC 건설 등 생산성 지출에 많이 사용되어 있어,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성장률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.

○ 따라서 재정적자의 증가가 반드시 재정위기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.

- 확대재정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대상을 다소 조정하여 사회보장, 농촌교육 및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임.

○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사회보장국채를 발행하고, 농촌 지역에서 9년제 의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임.

2. 금융정책

- ☐ 지난 수년간 중국정부는 통화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나, 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하며 디플레이션 국면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.
- 은행의 대출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,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. 따라서 정책당국은 은행대출의 유연성을 높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해야 함.
-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, 실물경제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체제를 개혁해야 함.
- o 중소기업과 비국유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형 금융기구를 발전시켜야 함.
- o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, 가계 소비대출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.

3. 물가정책

- ☐ 현재의 디플레이션 국면은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함.
-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혁신의욕과 소비자신뢰 하락을 가져와 민간투자와 소비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, 특히 농촌주민과 도시 저소득계층의 소비를 위축시킴.
- 총공급 측면에서 낙후된 대량생산 설비를 폐기하고, 총수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으로 수요를 확대해야 함.

4. 실업정책

- ☐ 실업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는 실업정책의 수립이 필요함.

- 원시적 실업, 즉 공업화의 낙후에 따른 실업은 사회보장체제의 구축과 비정규직 취업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함.
- 경기변동형 실업은 거시경제정책 운용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.
- o 재정지출 항목의 심사에서 고용효과 평가를 실시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. 고용인력을 늘릴 경우 세제 및 대출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.
-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교육을 통해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. (***)